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젠더리뷰

국내 · 외 여성통신

- 해외
- 국내

해외*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미국 스토킹 금지법 논의¹⁾

- 미국 내에서 스토킹은 아주 심각한 범죄로 여겨지고 있다. 1990년 캘리포니아(California)에서 처음으로 스토킹 법이 개정된 이래로 현재 미국 내 모든 주(States), 콜롬비아 특별구(the District of Columbia) 및 연방정부에서 스토킹 관련 법을 개정하였다. 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스토킹 범죄는 “반복적이고 침입적으로 이루어지는 피해자에게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National Center for Victims of Crime, 2022).
- 미국 내 전국 친밀한 관계 및 성범죄 설문조사(The National Intimate Partner and Sexual Violence Survey)를 바탕으로 한 질병관리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보고에 의하면 여성 3명 중 1명, 남성 6명 중 1명이 살면서 스토킹을 경험했으며 그 피해자 중 약 24%의 여성과 19%의 남성이 미성년자일 때 스토킹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8%의 여성 및 49%의 남성 피해자들이 25세가 되기 전에 스토킹을 경험한다고 밝혔다(CDC, 2022). 미국 사법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스토킹 가해자는 피해자와 현재 혹은 전 남자/여자 친구, 현 혹은 전 남편/부인, 친구, 직장 동료 등과 같이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 스토킹을 당하는 경우는 7%에 불과하다(U.S. Department of Justice, 2012). 스토킹을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 스토킹은 다양한 양상으로 발현되는데 최근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스토킹이 이슈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애플사의 에어태그(AirTags)를 이용해 상대방의 위치를 추적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에어태그를 자신의 차 열쇠나 지갑 등 부착하면 반복적인 블루투스 시그널(Bluetooth signal)을 통해 스마트폰 혹은 다른 애플 제품의 위치에

* 해외 여성통신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이 제공하는 국제동향 중 「해외통신원」 주요 기사를 정리한 것임.

1) 김춘례 세인트조셉대학교(Saint Joseph's University) 조교수

편승하여 태그의 소유자가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저렴하고 편리한 개인 위치추적장치가 상대방 몰래 원하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나쁘게 이용될 수 있는 것이 문제이다(CNN, 2022).

- 미국의 공공라디오방송(National Public Radio)과의 인터뷰에서 전자 프런티어 재단(the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의 에바 갈퍼린(Eva Galperin) 사이버보안 디렉터는 “[에어태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는 순간 걱정을 안 할 수 없었다. 이 제품이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토킹을 당하는지에 대한 리포트를 본 이후로 더욱 걱정되기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애플사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스토킹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으나 이는 비단 에어태그만의 문제가 아니다. 에어태그와 같은 위치추적 장치는 삼성, 소니와 같은 다른 회사에서도 출시되고 있고 이러한 개인 추적장치는 언제라도 스토킹을 위한 장치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NPR, 2022).
- 새로운 기술이 날로 발전하면서 전자제품을 이용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스토킹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 하나는 변화하는 기술을 반영한 법 개정 및 수정이다. 와이오밍 공공 라디오방송(Wyoming Public Radio)에 의하면 최근 와이오밍(Wyoming)주는 휴대폰, 아이패드, 컴퓨터 혹은 GPS 추적 장치를 이용해 상대방을 스토킹하거나 괴롭히는 것을 불법으로 하는 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현재 와이오밍주에서는 GPS 추적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그 장치를 이용해 상대방을 괴롭히는 경우도 불법이 아니다. 따라서 와이오밍주에서는 새롭게 개정될 법을 통해 위치추적장치를 스토킹과 같은 나쁜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처벌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된다(Wyoming Public Radio, 2022). 전국주의회의회의(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에 의하면 현재 미국 내 알래스카(Alaska), 애리조나(Arizona), 코네티컷(Connecticut), 일리노이(Illinois), 뉴욕(New York) 등 7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the District of Columbia)에서만 위치추적장치 사용금지 조항이 스토킹 법에 포함되어 있다. 와이오밍주에서 이 법이 개정이 되면 미국에서 위치추적장치를 금지하는 8번째 주가 될 것이다. 이외에 델라웨어(Delaware), 미시간(Michigan), 오리건(Oregon), 텍사스(Texas), 유타(Utah) 등의 주에서는 차 주인의 동의 없이 차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NCSL, 2022). 그 외의 다른 주들은 아직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스토킹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날로 발전하는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 CNN(2022.2.10.). "Apple plans AirTag updates to curb unwanted tracking", <https://www.cnn.com/2022/02/10/tech/airtag-safety-updates/index.html> (접속일: 2022. 6. 9.).
-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2022. 2. 14.). "Private Use of Location Tracking Devices: State Statutes", <https://www.ncsl.org/research/telecommunications-and-information-technology/private-use-of-location-tracking-devices-state-statutes.aspx> (접속일: 2022. 6. 9.).
- NPR(2022. 2.18.). "AirTags are being used to track people and cars. Here's what is being done about it", <https://www.npr.org/2022/02/18/1080944193/apple-airtags-theft-stalking-privacy-tech> (접속일: 2022. 6. 9.).
- U.S. Department of Justice(2012. 7. 1.). "Stalking victims in the United States-Revised", https://bjs.ojp.gov/content/pub/pdf/svus_rev.pdf (접속일: 2022. 6. 10.).

미국,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폐기 후 문제 논의

- 현재 미국 내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 이슈 중의 하나는 임신중지 관련 법안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한대로 2022년 6월 24일 미국 연방정부 대법원이 미시시피(Mississippi)주의 15주(15 weeks) 이후의 임신중지규제에 손을 들어주면서 로 대 웨이드(Roe v. Wade)의 1973년 결정이 뒤집혔다. 1973년 이후로 로(Roe) 판결 결정을 바탕으로 미국에서는 임신 중기까지의 임신중지가 허용됐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거의 반세기 동안 여성에서 주어졌던 헌법적 임신중지 권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로 인해 이제는 임신중지의 법적 허용 여부를 각각의 주(State)에서 결정하게 되었다(NPR, 2022.6.24).
- 대법원이 임신중지권의 허용 여부를 각각의 주(State) 법에 맡기게 됨에 따라 주마다 임신중지법을 어떻게 할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 내 반 이상의 주에서는 더욱 강력한 임신중지 규제법이 개정/실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미국 내의 13개 주에서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법이 존재한다. 그중 앨라배마(Alabama), 아칸소(Arkansas), 켄터키(Kentucky), 루이지애나(Louisiana) 등 8개의 주에서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는 즉시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법이 실효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임신중지 시술 행위를 하는 것이 중죄로 간주돼 시술자는 수십 년 동안 감옥에 수감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임신이 성폭력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것이든 상관없이 법이 적용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임신중지 시술을 받은 여성은 법상 처벌을 받지 않게 하고 있다(CNBC, 2022).
- 이에 반해 많은 북동부 주와 서부해안 주들은 여전히 낙태권을 보장하고 있다. 알래스카(Alaska), 뉴저지(New Jersey), 뉴멕시코(New Mexico) 등 6개 주에서는 임신 28주가 지나지 않은 이상 임신 중 언제나 임신중절 시술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태아 기형, 산모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건강 문제 등은 임신 후기에도 언제나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임신중지가 필요한 경우가 항상 존재한다는 이유 때문이다(NPR, 2022.7.13).
- 또한 어떤 주의 경우는 국민 투표를 통해 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미시간(Michigan) 주의 경우, 성폭력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여부에 상관없이 임신 중지를 중범죄로 여기는 90년 된 미시간 주법(State laws)이 현존하고 있어 이를 기각하

기 위한 제안된 헌법 개정을 투표로 결정하려고 추진 중이다. 만약 이 안이 채택된다면 미시간 시민들은 투표로 주의 법이 임신중지, 피임, 불임 치료와 같은 개인의 생식의 자유(reproductive freedom)를 보장하도록 개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 캘리포니아(California)와 버몬트(Vermont)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미시간의 경우 캘리포니아나 버몬트와 다르게 현재 임신중지 금지법이 존재하고 있어 곧 임신중지가 금지될 예정이다(NPR, 2022.7.7).

- 연방정부의 임신중지 보장권이 폐지된 후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주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주에서 시술을 받으러 가야 하는 등 여러 가지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오하이오(Ohio)주에 거주하는 성폭행 피해자인 10살 어린이가 오하이오의 임신중지 금지법 때문에 임신중절을 하기 위해 다른 주로 가야 하는 기사를 접한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이 임신중지 보장권 폐지로 인해 피해자가 겪어야 하는 고통의 한 예라며 공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하지만 이 법의 여파는 비단 임신중지 시술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임신중지 금지법의 영향으로 임신중절 시술이 점점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많은 여성들이 온라인을 통해 임신중절 약을 구입해 본인 스스로 임신중절을 시도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신중절 약을 사용하는 것은 제대로 된 정보와 지원체계가 있다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지만 많은 여성들이 임신을 중절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더욱 위험한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 중에 과다출혈 등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가 발생해도 많은 여성들이 의료시설 도움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걱정하고 있다. 물론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임신중절을 받은 여성을 처벌하는 법은 없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않은 경우가 높다는 것이다. 이는 산모와 태아의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임신중지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임신중절을 돕기 위해 시술이 불법이지 않은 주로 가서 시술을 행하는 사람을 처벌하거나 임신중절약을 파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제안하고 있다(NPR, 2022.7.11). 하지만 이런 방법은 불법으로 약을 파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그로 인해 발행할 수 있는 여성들의 건강 문제를 방지할 수 있지만, 임신중절이 필요한 사람들의 상황을 더욱더 어렵게 할 것이다.
-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임신중지를 불법으로 하는 주에서의 시험관 아기 시술과 같은 불임 치료(Fertility treatments)도 위협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시험관 시술은 난소에서 최대한 많은 배아를 만들어 건강한 배아는 이식하고 그렇지 않은 배아의 경우 폐지하는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주의 법이 태아(unborn humans)를 임신의 이른 단계인 배아로 정의한다면 시험관 시술에서 행해지는 일상적인 프로세스가 법에 규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시간주의 1931년 임신중지 금지법에 의하면 (현재는 법정이 임신중지를 금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이 일시중지된 상태이다) 시험관 시술 병원에서 배아를 폐기하는 행위가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다(NPR, 2022.7.11).
- 이러한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대법원 결정이 나오고 임신중지를 찬성하

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최근에 실시된 공영 라디오 방송/공영방송/마리스트(NPR/PBS Newshour/Marist Poll)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부분 미국 사람들은 대법원의 최근 결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56%가 대법원의 결정에 반대한다고 했으며 40%만이 찬성한다고 하였다. 응답자의 성별로는 59%의 여성, 54%의 남성이 반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응답자의 정치 성향에 따라 찬성 및 반대 의견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88%의 민주당 지지자가 대법원의 판결에 반대한다고 밝힌 반면 오직 20%의 공화당 지지자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무소속인 경우 59%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47%의 대학 교육 미만의 사람들이, 69%의 대학교육 이상의 응답자가 대법원의 결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많은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이(58%) 로 대 웨이드 결정 이후 대법원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거나 전혀 없다고 대답한 바 있다(NPR, 2022.6.27).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슈는 만약 임신중절이 주 법에 의해 행해지지 못해질 경우 그로 인해 태어날 아이와 그 아이의 엄마에 대한 책임도 과연 주(State)에게 있는 것인가이다. 미국 공영라디오 방송국(national public radio)과의 인터뷰에서 싱크탱크(think tank) 기관인 브루킹 인스티튜션(the Brookings Institution)의 경제학 선임 연구원 스튜어트 버틀러(Stuart Butler)는 “미국 내에서 어린이 및 임신부를 위한 가장 낮은 수준의 의료 시스템 혹은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는 주가 남부에 위치해 있다. 또한 남부에 있는 반 이상의 주에서 메디케이드(Medicaid)라고 불리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보장 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주에 임신중지 금지법이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원체계가 없으면서 임신중절도 금지하는 주에서 사는 여성 및 어린이들의 경우 이중으로 불행한 상황을 겪는 것이다. 임신중절을 금지하면서 여성 및 어린이들이 필요한 자원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겠다. 전국적으로 이미 산모 및 어린이들의 기대수명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저임금 여성 및 유색 인종 여성 임신부 사망률은 아주 높은 수준이다. 임신중지 금지법으로 인해 그들의 사망률은 더욱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NPR, 2022.7.13).

- 최근 대법원의 임신중지권 보장 폐지는 미국 사회 내에서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민심을 반영해야 하는 대법원의 결정이 민심과는 반대로 되고 있으며 또한 임신중절 금지로 인해 여성 및 가족, 또 그 사회가 겪게 될 문제는 많을 것이라고 쉽게 예상된다. 또한 임신중지금지로 인해 겪게 될 여러가지 경제적 정신적 문제를 지원할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앞세워 임신중지 금지를 주장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에서 임신중지 금지법을 실행하거나 곧 실행할 계획이어서 많은 미국 국민들은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 참고문헌 •

- CNBC(2022.6.24.). "Several U.S. states immediately ban abortion after Supreme Court overturns Roe v. Wade", <https://www.cnn.com/2022/06/24/us-states-immediately-institute-abortion-bans-following-roe-ruling.html> (접속일: 2022.7.13.).
- NPR(2022.6.24.). "Supreme Court overturns Roe v. Wade, ending right to abortion upheld for decades", <https://www.npr.org/2022/06/24/1102305878/supreme-court-abortion-roe-v-wade-decision-overturn> (접속일: 2022.7.13.).
- NPR(2022.6.27.). "Poll: Majorities oppose Supreme Court's abortion ruling and worry about other rights", <https://www.npr.org/2022/06/27/1107733632/poll-majorities-oppose-supreme-court-abortion-ruling-and-worry-about-other-rights> (접속일: 2022.7.13.).
- NPR(2022.7.7.). "Self-induced abortions can raise medical — and legal — questions for doctors", <https://www.npr.org/2022/07/07/1110165323/self-induced-abortion-can-raise-medical-and-legal-questions-for-doctors> (접속일: 2022.7.14.).
- NPR(2022.7.11.). "Fertility treatments could be in jeopardy in anti-abortion states, IVF patients fear", <https://www.npr.org/2022/07/11/1110904525/fertility-treatments-could-be-in-jeopardy-in-anti-abortion-states-ivf-patients-f> (접속일: 2022.7.14.).
- NPR(2022.7.13.). "A record number of abortion related questions are on states' ballots this year", <https://www.npr.org/2022/07/13/1111244760/a-record-number-of-abortion-related-questions-are-on-states-ballots-this-year> (접속일: 2022.7.13.).
- NPR(2022.7.13.). "Many states have anti-abortion laws. Will they provide a social safety net for moms?", <https://www.npr.org/2022/07/13/1111244809/many-states-have-anti-abortion-law-s-will-they-provide-a-social-safety-net-for-moms> (접속일: 2022.7.14.).

유럽의회, 기업 여성임원 할당제 합의²⁾

- 지난 6월, 유럽연합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와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이하 EP)는 상장기업 내 비상임 이사회(non-executive boards)의 최소 40%를 여성으로 임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침안(Directive)에 합의했다.³⁾ 이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가 2012년 지침 입법안을 제출한 이래 10여 년간 답보상태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지침안은 영국을 비롯해 여러 회원국들의 반대에 부딪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오랜 기간 찬반 논의가 반복되어 온 의제였다. 그러다 유럽위원회(EC)는 2020년 법안을 일부 수정하여 추진했고, 드디어 정치적 합의에 이른 것이다.
- 엄밀히 말하면, 본 지침은 상장기업 의사결정직 내 성별 균형을 목표로 한다. 즉, 기업은 같은 자격을 갖춘 후보 중 '대표성이 낮은 성별(underrepresented sex)'을 가진 후보를 임원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낮은 성별은 기업 대부분에서 여성이다 보니, 이번에 합의에 이른 지침은 여성의 유리천장을 없애기 위한 유럽연합의 제도적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 2026년 6월 30일자로 발효되며, 유럽연합 회원국 내 250명 이상 피고용자가 근로하는

2) 콕서히, 에라스무스로테르담대학(Erasmus University Rotterdam) 국제사회과학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al Studies) 객원연구원

3) 유럽연합의 법률체계에서 지침(Directive)은 지침에서 제시하는 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회원국에게 구속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형식과 수단 등 실질적인 내용은 회원국에 위임하는 형태이다.

상장기업에 적용된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지침에서는 최고경영자(chief executive officer, CEO), 최고운영책임자(chief operating officer, COO)와 같은 임원급의 최소 33%는 여성으로 임명할 것을 명시했다. 본 지침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명시된 할당제 비율을 달성하지 않은 기업은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 단, 능력이나 자격이 부족한 여성을 임명해서라도 비상임이사 40% 여성 할당 비율을 무조건 채워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본 지침은 기업이 비상임이사 선임과정에서 성별과 관계없이 개인의 역량에 근거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성별이 다른 두 명의 후보자가 있을 때, 갖춘 자격과 역량이 같다면 기업 내 이사회에서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낮은 성을 가진 후보에게 우선권을 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그리고 탈락한 후보가 요청할 경우, 해당 기업은 후보 평가 기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본 지침이 제시하는 목표대로 여성임원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기업은 그 사유와 더불어 성별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유럽위원회(EC)의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이번 지침안 합의에 대해 “다양성은 비단 공정성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성장 및 혁신을 이끄는 원동력이다. 이제는 유리천장을 깨뜨려야 할 적기다. 이사직에 걸맞은 자격을 갖춘 여성들이 매우 많다. 그런 여성들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 앞으로는 유럽의회(EP)와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가 공동결정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입법 승인해야 하는 단계가 남아 있는데, 유럽이사회는 각 회원국 정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절차를 통과하고 유럽연합관보(Official Journal)에 발표된 시점으로부터 20일 이후 발효되고 회원국들은 2년 내에 각 국가 법률로 적용해야 한다. 본 지침은 회원국별 정부 당국에서 이행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권한을 가지며, 회원국별 법원은 만약 기업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이사회 선출을 무효화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 유럽위원회(EC)의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8개 회원국은 여성임원 할당제를 이미 채택하여 이행 중이며, 10개국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수준의 할당제를, 9개국은 관련 법이 부재한 상황이다. 유럽양성평등연구소(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가 2021년 10월 데이터를 기준으로 발표한 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럽연합 회원국에 상장한 기업 내 이사직에 임명된 여성 비율은 평균 30.6%로 나타났다. 그동안의 발전 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 회원국 평균 8.2%에서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며 2021년 30.6%에 도달한 것으로, 지속적인 기업 내 여성임원 비율 상승 경향을 보인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 반면, 유럽연합에 속한 회원국별 상황을 살펴보면 편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합의된 지침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40% 목표치를 충족하는 국가는 27개 회원국 중 45.3%를 기록한 프랑스뿐이었다. 프랑스는 국가 차원에서 기업 이사회 내 여성 비율

40% 할당제를 이미 시행 중인 국가이다. 이탈리아(38.8%), 네덜란드(38.1%), 스웨덴(37.9%), 벨기에(37.9%), 덴마크(36.0%)가 그 뒤를 이었다. 이 중 이탈리아, 벨기에, 덴마크는 여성임원 할당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반면 최하위권 국가는 헝가리(9.4%), 에스토니아(9.1%), 사이프러스(8.5%)로, 기업 이사회 내 여성임원이 10명 중 1명에 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리고 직급을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봤을 때, 여성 최고경영자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기업 내 이사회장(board chair) 여성 비율은 8.5%, 최고경영자(CEO) 여성 비율은 7.8%로 나타났다. 이 역시 과거 이사회장 1.7%(2003년), 최고경영자 2.2%(2013년)이었던 수치를 고려하면 상당 부분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최고 경영진 직급에 임명된 여성은 상당히 적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 이번 법안을 유럽연합 회원국 정부들과 협상하는 데 관여했던 네덜란드 노동당(Labour Party) 소속인 라라 볼터스(Lara Wolters) 유럽의회 의원은 기업 내 성평등은 그저 운이 좋아 이루어지는 게 아님을 데이터가 말했다. 또한 이사회 내 다양성 증진은 더 나은 의사결정 절차 및 결과 도출에 기여하고, 여성임원 할당제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긍정적인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 이번 사례는 유럽의회 차원에서 상장기업 의사결정직 내 여성 대표성 증진에 관한 정치적 합의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최근 지침안이 가결되었고, 2026년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발효되는 만큼, 본 지침만으로 여성의 민간분야 의사결정직 내 대표성 증대에 미치게 될 영향을 판단하기는 시기상조일 수 있다. 그러나 우선 유럽연합 차원에서 10년 만에 합의된 지침이라는 점, 여성임원 비율 40%, 최고경영직 비율 33%라는 구체적인 수치, 불이행 관련 제도적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 자체는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각국별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 본 지침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도입할지 지켜볼 만하다.

• 참고문헌 •

- European Commission(2022.6.7.). "Commission welcomes political agreement on Gender Balance on Corporate Boards",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3478 (접속일: 2022.8.22.).
- 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2022.4.19.). "Statistical brief: gender balance in business and finance 2021", <https://eige.europa.eu/publications/statistical-brief-gender-balance-business-and-finance-2021> (접속일: 2022.8.22.).
- European Parliament(2022.6.7.). "Women on boards: deal to boost gender balance in companies",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20603IPR32195/women-on-boards-deal-to-boost-gender-balance-in-companies> (접속일: 2022.8.22.).
- The Guardian(2022.6.7.). "EU agrees 'landmark' 40% quota for women on corporate boards",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22/jun/07/eu-agrees-landmark-40-quota-for-women-on-corporate-boards> (접속일: 2022.8.22.).

영국 임신중절 관련 정책 동향⁴⁾

■ 2022년 6월 24일 미국에서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이 대법원에 의해 폐기되면서, 미국에서 여성들의 임신중절권에 대한 헌법적 권리가 사실상 사라졌다. 해당 판결 이후 영국에서도 미국과 같이 여성들의 임신중절권이 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겨났다. 특히, 영국의 도미니크 랫(Dominic Raab) 법무부 장관(Justice Secretary)이 2022년 6월 22일 의회에 제출한 권리장전 개정법안(Bill of Rights Bill)에 임신 중절권이 제외되면서 임신 중절권의 법적 보장에 대한 논쟁이 불거졌다. 도미니크 랫 장관은 임신중절권은 영국에서 법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권리장전에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지만, 반대 입장에서는 임신 중절이 영국에서 법적인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비판한다. 관련하여 본문에서는 영국의 임신 중절에 대한 법적인 근거,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개정된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 임신중절에 관한 영국의 법률적 근거

- 영국에서 여성의 임신중절은 1967년 「임신중절법」(Abortion Act 1967;이하 「임신중절법」)에 기반한다. 「임신중절법」에 따르면, 등록된 전문의에 의해 임신중절이 시행되고, 2명의 전문의가 여성의 상황이 법에서 규정한 조건에 해당 된다고 판단하면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임신중절법」에서 규정한 처벌 제외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임신이 24주 이내이며, 출산이 산모 또는 가족과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친다고 판단되거나; 2) 임신중절이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것을 예방하거나; 3) 임신의 지속이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4) 태아가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지는 경우이다.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임신 24주가 지나도 예외적으로 임신중절을 법적인 처벌 없이 시행할 수 있다.
- 최근 제출된 도미니크 랫 장관의 권리장전 개정안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위의 조건들 때문이다. 임신중절은 영국에서 법률적인 권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해당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형법상 기소 및 처벌에서 면제되는 예외 사항일 뿐이다. 도미니크 랫 장관은 임신중절에 관한 사안은 의원들의 양심에 따른 문제(matter of conscience)이기 때문에 권리장전에 임신중절권이 없어도 미국처럼 임신중절에 대한 헌법적 권리가 폐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대하는 의원들은 임신중절이 법률적 권리가 아닌 예외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권리장전에서 삭제한다면 정권에 따라 임신중절에 대한 정책이 여성들의 근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바뀔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 임신중절에 관한 의료 접근성

4) 임다혜 런던열대의학위생대학 국제보건/보건정책학 박사과정

-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임신중절은 합법이고, 영국의 국가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s; 이하 NHS)에서 모든 비용을 보장한다. NHS 병원이나 면허가 있는 의원에서 무료로 약을 처방받거나,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임신중절을 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직접 임신중절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을 한다. 두 번째, 주치의에게 임신중절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에 연계(referral) 요청을 한다. 세 번째, 성재생 건강의원에서 임신중절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에 연계(referral) 요청을 한다. 이 모든 과정은 2주 내로 진행된다.
- 영국의 임신중절에 관한 의료 접근성이 많은 국가들과 다른 점은 상담이 임신중절을 합법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NHS에서는 임신중절에 대한 결정은 산모 스스로 내린다는 점을 강조하며, 산모가 가족, 동반자, 또는 친구와 상의를 할 수 있지만, 그들이 산모의 결정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다는 것을 명시한다. 같은 맥락에서 상담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여성들이 임신중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NHS는 산모가 상담이 필요할 경우 찾아갈 수 있는 센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여기에는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 상담 센터도 포함된다.

■ 코로나19 시기의 임신중절에 관한 의료 접근성

- 코로나19 시기에 병의원 방문을 통한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 Social Care)는 2020년 11월 26일부터 2021년 2월 26일까지 임신중절 서비스 제공 의원에 산모가 직접 스스로 연계(self-refer)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상담으로 초기 의료 임신중절(Early Medical Abortion)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임시로 허용했다. 초기 의료 임신중절약은 임신 10주까지 처방받을 수 있고, 코로나19 이전에는 임신중절법에 의거하여, NHS의 절차에 따라 처방되었다.
- 영국의 임신중절에 관한 의료 접근성이나 의료보장 범위를 보면, 임신중절이 법적인 권리로 보장되는 것 같다. 하지만, 임신중절법을 살펴보면 임신중절을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의 범위가 넓을 뿐이지, 조건 없이 주어지는 기본권리는 아니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인 도미니크 랍이 제출한 임신중절권이 삭제된 권리장전 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는지 여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결과에 따라, 영국에서의 임신중절법과 보건 의료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도 지켜봐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Guttmacher Institute(2022). "Roe v. Wade Overturned: Our Latest Resources" <https://www.guttmacher.org/abortion-rights-supreme-court#> (접속일: 2022.07.20.).
- The Conversation(2022.6.18.). "UK abortion laws are more precarious than they seem - replacing the Human Rights Act could unsettle them further", <https://theconversation.com/uk-abortion-laws-are-more-precarious-than-they-seem-replacing-the-human-rights-act-could-unsettle-them-further-186353> (접속일: 2022.07.20.).
- UK Parliament(업데이트 날짜: 2022.7.21.). "Bill of Rights Bill", <https://bills.parliament.uk/bills/3227> (접속일: 2022.07.20.).
- BBC(2022.06.29.). "No strong case for changing abortion rules, says Dominic Raab", <https://www.bbc.com/news/uk-politics-61981988> (접속일: 2022.7.20.).
- Legislation.GOV.UK(1967). "Abortion Act 1967",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67/87/section/1> (접속일: 2022.7.22.).
- The Guardian(2022.06.29.). "Dominic Raab says right to abortion does not need to be in bill of rights",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22/jun/29/dominic-raab-says-right-to-abortion-does-not-need-to-be-in-bill-of-rights> (접속일: 2022.7.22.).
- NHS(2020.4.24.). "Abortion", <https://www.nhs.uk/conditions/abortion/> (접속일: 2022.7.22.).
- Department of Health & Social Care(2022.3.10.). "Home use of both pills for early medical abortion up to 10 weeks gestation",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home-use-of-both-pills-for-early-medical-abortion/home-use-of-both-pills-for-early-medical-abortion-up-to-10-weeks-gestation> (접속일: 2022.7.23.).

영국 한부모가구 지원정책 동향

- 영국의 "한부모 권리 캠페인(Single Parent Rights Campaign)"을 창시한 루스 텔봇(Ruth Talbot)에 의하면, 2021년을 기준으로 영국 한부모가구의 약 80% 정도가 여성이다. 이는 한부모가구 이슈가 젠더 이슈라는 점을 시사한다. 영국의 한부모가구는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는데, 특히 통합급여(Universal Credit)를 지급받는 가구 중에서 양부모가구가 10%인 반면, 58%가 한부모가구라는 것과 한부모가구 아동의 50%가 상대적 빈곤에 처해있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한부모가구의 소득은 양부모가구에 비해 2배나 감소했다. 최근의 극심한 물가상승은 한부모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서, 푸드뱅크(Food Bank)와 긴급지원정책을 찾는 이들이 대폭 상승했다. 영국 정부는 최근에 "일하러 가는 길 캠페인(Way to Work Campaign)"을 비롯하여 2013년부터는 통합급여와 같이 한부모가구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했지만, 전문가들은 영국의 지원정책은 많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평가한다. 본문에서는 영국의 한부모가구를 지원하는 주요정책과 사각지대를 함께 살펴볼 것이다.

- 신속한 고용확충을 위한 "일하러 가는 길 캠페인(Way to Work Campaign)"
 - 2022년 영국의 노동연금부(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는 코로나19 이후 실업인구가 늘어나고,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해진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확대 정책인 "일하러 가는 길 캠페인"을 시행했다. 노동연금부는 실업인구가 빠르게 고용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과 연계하고, 영국의 고용센터인 잡센터 플러스

(Jobcentre Plus)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기존의 실업수당 수혜조건을 수정했다. 최소 50만 명이 고용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업인들은 기존에 종사하던 직종이 아닌 다른 직종에서의 구직활동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에는 실업수당 수혜자들이 구직활동을 3개월 동안 할 수 있었다면, 개정된 수혜조건은 구직 기간을 4주로 감축했다. 해당 정책은 통합 급여의 수혜자들에게 집중된 정책으로써, 코로나19 기간에 일자리를 잃고, 저소득층에 해당하여 통합 급여를 받는 많은 한부모가족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

■ 한부모가족의 상황과 젠더불평등을 악화할 가능성이 높은 정책의 사각지대

- 해당 정책은 급증하는 실업인구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아동돌봄과 경제활동을 동시에 하기 어려워 일자리를 잃은 인구가 많은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책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정책이 대부분이 여성인 한부모가족의 상황과 젠더불평등을 악화한다고 평가한다. 기본적으로 통합급여는 저소득층에게 기초생활수급과 같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지원정책이다. 새로 시행된 “일하러 가는 길 캠페인”은 실업수당 청구자가 주 35시간 동안 구직활동에 전념해야 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통합 급여를 일부 또는 전부를 박탈한다.
- 해당 정책은 실업인구를 빠르게 고용시장으로 진입하게 지원하여, 이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기존에 받던 통합 급여의 금액보다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 그렇게 될 경우,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하지만, 4주간의 짧은 구직활동 기간에 주 35시간씩 의무적으로 구직활동을 행해야만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오히려 그들을 불안정 노동시장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구직활동 기간에 교육을 받거나,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여성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데, 빠른 시간에 고용시장에 진입해야 할 경우 주어진 일자리는 저임금 불안정 노동뿐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는 결국 성별임금격차를 심화하고, 한부모가족을 저소득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영향을 초래한다.

■ 한부모가족을 집중하여 지원하는 정책의 부족

- 영국에서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은 양육수당금, 세금감면, 아동돌봄지원, 그리고 생활수급 지원 등과 같이 많은 나라들에서 시행하는 정책들과 유사하다. 그러나 해당 정책들은 한부모가족에만 특정하여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집단 (주로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대부분의 한부모가족이 저소득층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위의 지원정책에 해당될 확률이 높은 것이지 영국 정부에서 특별히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책을 고안하지는 않는 상황이다. 영국 복지정책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평등법(Equality Act)에도 한부모가족은 명시되어있지 않아 위의 사례처럼 한부모가족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19 이후의 상황과 급격한 물가상승률로 인해, 한부모가족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극심하게 경험하고 있어 한부모가족

를 특정하게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영국이 한부모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어떤 지원 정책을 시행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Kings College London(2022.2.03.). "Overlooked and underserved: why have UK policymakers ignored single parent families?", <https://www.kcl.ac.uk/news/overlooked-and-underserved-why-have-uk-policymakers-ignored-single-parent-families> (접속일: 2022.8.20.).
- The Conversation(2022.2.10.). "The UK's 'work-first' approach to benefits hurts mothers", <https://theconversation.com/the-uks-work-first-approach-to-benefits-hurts-mothers-176074> (접속일: 2022.8.20.).
- The Guardian(2022.7.4.). "I'm really feeling the squeeze': single mothers on the living costs crisis",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22/jul/04/im-really-feeling-the-squeeze-single-mothers-on-the-living-costs-crisis> (접속일: 2022.08.20.).
- GOV.UK(2022.1.27.). "New jobs mission to get 500,000 into work", <https://www.gov.uk/government/news/new-jobs-mission-to-get-500-000-into-work> (접속일: 2022.8.21.).
- GOV.UK. "Child Claim Benefit", <https://www.gov.uk/child-benefit/how-to-claim> (접속일: 2022.8.2.).
- Metro(2021.12.15.). "Single mum benefits UK: What are single parents entitled to?", <https://metro.co.uk/2021/12/15/single-mum-benefits-uk-what-are-single-parents-entitled-to-15770091/> (접속일: 2022.08.22.).

독일, 임신중절에 관한 광고금지 조항 폐지와 이에 따른 전망⁵⁾

■ 독일에서 임신중절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형법」 218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신부가 공인된 상담기관에서 임신중절에 관해 상담을 받고 사흘간의 숙려기간을 거쳤으며 착상 후 12주 이내에 의사에 의해 중절수술이 집도 될 경우 위법성을 조각하는 조건을 둬으로써, 현실적으로 비교적 안전한 임신중절이 가능하기도 하다. 다만 산부인과 의사가 영리 목적으로 임신중절수술을 광고하는 행위는 「형법」 219a조⁶⁾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 이하 본문에서는 「형법」 219a조의 폐지와 218조의 존속이 갖는 영향에 대해 다루도록 한다.

■ 임신중절에 관한 광고금지 조항 폐지

- 2022년 6월 24일 독일 연방의회(Bundestag)는 「형법」 219a조 '임신중절에 관한 광고 금지 조항'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항은 2019년 한 번 개정되어, 의사가 자신의 의료시설에서 수술을 행하는지의 여부를 인터넷상에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다. 해당 조항의 완전한 폐지는 사민당(SPD), 녹색당(Grünen), 자민당(FDP) 및 좌파당(Die Linke)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이 결정은 7월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의사는 임신중절에 관해 단지 면담을 통해 정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상에 중절수술 가능 여부와 그 방법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고지해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연방정부는 이에 따라 여성들이 낙태 시술에 대한 사실적이고 전문적인

5) 현지원 베를린자유대학교 교육이론 석사과정

정보를 더 쉽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또한 1990년 10월 3일 이후에 이루어진 219a조에 근거한 모든 형사 법원 판결은 무효화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들이 복권되고, 진행 중인 소송은 중단될 예정이다. 연방정부는 더 나아가 재생산 및 자기결정권에 관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신중절 문제를 더 이상 「형법」의 영역에서 다루지 않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 「형법」 218조에 대한 비판과 그 폐지논의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

- 그러나 임신중절을 여전히 ‘생명에 대한 범죄’로 규정하는 「형법」 218조의 존속이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임신중절 행위에 사회적 낙인을 찍음으로써 출산을 국가적으로 강요하는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임신중절은 앞서 밝혔듯 공인된 상담기관을 통해 상담을 거쳤다는 증명서를 받고 수술 전 사흘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착상 후 12주 이내에 의사에 의해 수술이 집도될 경우에 한해 형이 면죄된다. 이에 더해 임신의 지속이 산모에게 생명의 위협 혹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져가 줄 경우, 그리고 임신이 성폭력 같은 범죄적 요인으로 인해 이루어졌을 경우를 위법성 조각 사유로 보고 있다.
- 따라서 여성의 재생산권 및 자기결정권의 회복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형법」 218조 또한 폐지되고 임신중절이 비범죄화되어야 하나, 이에 대해서는 「형법」 219a조를 폐지하는데 찬성했던 정당들 또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사민당(SPD)과 녹색당(Grünen)은 임신중절이 「형법」의 영역에 속해서는 안되며 2022년에 개정 혹은 폐지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민당(FDP)은 「형법」 218조와 219a조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하며 낙태 자체를 합법화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우니온(Union)과 대안당(AfD)의 경우, 219a조의 폐지에 대해서조차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의 보호를 포기’하는 결정이라며 큰 유감을 표했다.

■ 218조가 여성의 보건복지에 미치는 영향

- 218조의 존재는 임신중절 시술을 제공하는 의사의 수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근본적으로 불법인 시술을 행한다는 낙인과 소위 ‘생명지킴이(LebensschützerInnen)’들의 위협으로 인해 임신중절을 제공하는 의사는 독일 전역의 산부인과 의사 19,000명 중 약 1,200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 중 상당수가 1970년대에 218조 폐지 운동에 연대한 2차 여성권익운동 세대로서, 현재 상당수가 은퇴 연령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임신중절을 원하는 임신부는 지역에 따라 수술을 위해 의사가 있는 곳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만 한다.
- 219a조의 폐지는 새 정부의 신호등 연정(사민당SPD, 자민당FDP, 녹색당Grünen)이 내세운 목표 중 하나였다. 이들이 발표한 연정 협약에 따르면 임신중절을 의료인의 직업실습과정의 일부로 만드는 것과 임신중절수술로 발생하는 의료적 비용을 기본적인 복지비용으로 충당하는 것 또한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218조를 폐지하는 것에 연정에 참여한 모든 정당이 합의하여 임신중절의 비범죄화가 이루어진 후에

가능한 것이다. 218조 폐지가 정치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지금, 올해 하반기에 어떤 관련된 정책 혹은 입법안이 제시될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 Bundesministerium der Justiz(2022). "Strafgesetzbuch (StGB) § 218 Schwangerschaftsabbruch", https://www.gesetze-im-internet.de/stgb/_218.html (접속일: 2022.7.19.).
- BMFSFJ(2022.6.24.). "Bundestag beschließt Aufhebung des Werbeverbots für Schwangerschaftsabbrüche",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bundestag-beschliesst-aufhebung-des-werbeverbots-fuer-schwangerschaftsabbrueche-193830> (접속일: 2022.7.19.).
- BMFSFJ(2018.7.26.). "Schwangerschaftsabbruch nach § 218 Strafgesetzbuch", <https://www.bmfsfj.de/bmfsfj/themen/familie/schwangerschaft-und-kindwunsch/schwangerschaftsabbruch/schwangerschaftsabbruch-nach-218-strafgesetzbuch-81020> (접속일: 2022.7.19.).
- TAZ(2022.6.24.). "Ein großartiger Tag", <https://taz.de/Abschaffung-von-Paragraf-219a/!5863365/> (접속일: 2022.7.20.).
- TAZ(2022.01.18.). "... und jetzt weg mit 218!", <https://taz.de/Streichung-des-Paragrafen-219a/!5826226/> (접속일: 2022.7.20.).
- TAZ(2022.06.19.). "Treibt Paragraf 218 ab", <https://taz.de/Selbstbestimmt-leben/!5859268/> (접속일: 2022.7.20.).

스페인 정부, 유급 생리휴가제 입법 추진⁶⁾

- 지난달, 스페인 내각은 여성 근로자의 생리휴가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법안에 따르면, 생리기간 중 생리통을 겪는 여성 근로자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할 경우 3일, 중증의 통증으로 업무나 일상생활이 힘든 경우 5일간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유급휴가로, 국가의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임금을 부담한다. 정부는 본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하원과 상원을 통과해야 법률로 제정된다. 만약 법률로 제정 및 시행되면,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약 2,400만 유로(한화 약 32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 이번에 도입하게 된 생리휴가제는 스페인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적인 출산·생식 보건정책 개혁의 일환이다. 즉 이번 재생산 보건정책 개혁안은 출산 및 생식보건 분야에 있어 여러 가지 정책 수정 방향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중 몇 가지 예를 들자면, 기존에는 16~17세 미성년자 청소년이 임신한 경우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임신중지가 가능했다. 하지만 본 법안에서는 낙태법을 일부 개정하여 앞으로는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서가 없어도 임신중지 시술을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모든 공공의료시설에서 임신중지 시술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진다. 단, 임신중지 시술을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료진이 양심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그 의사를 존중한다.
- 그리고 본 법안이 통과되면 여성 근로자는 임신 39주부터 유급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이번 스페인 정부의 출산·생식 보건 정책 개혁안은 성차별주의,

6) 객서희, 에라스무스로테르담대학(Erasmus University Rotterdam) 국제사회과학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al Studies) 객원연구원

- 원치 않는 임신이나 성병을 예방하기 위한 전 연령대 학생 대상 성교육 실시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생리대가 필요한 여학생들에게 무료로 생리대를 배포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에 속하는 여성인 경우 무료로 생리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정부는 이번 개혁안을 통해 생리대에 부과되던 부가가치세율을 폐지하고자 했으나 재정적인 문제로 일부 반대가 있었다. 생리대 부가가치세율을 4%로 낮추자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으나 이번에 발표된 법안에서는 우선 현행 10%로 유지한다. 이레네 몬테로(Irene Montero) 평등부 장관(Minister of the Ministry of Equality)은 내년 정부 예산을 책정하는 시기에 이르면 다시 이 문제를 의제로 제기하여 추진해 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이번 법안에 대해 이사벨 로드리게즈(Isabel Rodríguez) 스페인 정부 대변인은 여성을 위한,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한 진일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레네 몬테로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여성의 생리가 사회적 금기사항도 아닐뿐더러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진통제를 먹거나 아픈 배를 잡고 출근해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 페드로 산체스(Pedro Sanchez) 총리는 본인의 공식 트위터(Twitter) 계정을 통해 이번 에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은 여성주의적 관점을 적용했으며, 여성은 본인의 신체에 대해 자유롭게 주체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올해 초, 산체스(Sanchez) 총리는 여성주의적 관점을 도입하는 것이 곧 가장 바람직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하지만 본 법안이 의회를 수월하게 통과하여 법률로 제정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법안은 올해 중 하원 투표에 앞서 공청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산체스 총리가 이끄는 소수연정 내각이 이번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정도로 의회로부터 충분히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제기되었다. 일각에서는 여성 근로자에 대한 인식을 더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제1야당인 보수 성향의 국민당(Popular Party) 역시 정부의 재생산 보건 정책 개혁안 발표에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알베르토 누네스 페이호(Alberto Nunez Feijoo) 당대표는 이번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었던 정보당국의 정부 고위 인사 일부를 대상으로 한 휴대폰 도청 의혹으로부터 대중의 관심을 돌리려는 정치적 시도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 노동계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양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스페인의 주요 노동조합 중 하나인 스페인노동총연맹(Unión General de Trabajadores, UGT)의 크리스티나 안토냐스(Cristina Antón) 부대표(Deputy Secretary)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생리휴가제 도입이 장기적으로는 여성이 취업하는 데 도리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미 구직 과정에서 '아이를 가질 계획이 있는가'와 같은, 남성에게는 묻지 않는 질문들을 여성 구직자에게 묻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생리기간 중 생리통이 심한 편인가'라는 질문까지 추가될 형국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번 법안 논의 과정에서 노동조합들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 반면 또 다른 노동조합인 스페인 노동자위원회(Comisiones Obreras) 측은 이번 생리휴가제 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여성 근로자가 아파하면서까지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생리기간 중 겪는 고통을 숨길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이번 법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는데, 그중 하나는 의사 소견서 의무 제출이다. 실질적으로 많은 사례가 의학적인 질환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 앙헬라 로드리게스(Ángela Rodríguez) 평등·반(反)성범죄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Equality and against Gender Violence) 역시 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생리통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으며, 여기서 통증이란 단순히 약간의 불편감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두통, 고열과 같은 의학적 증상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⁷⁾
- 현재 생리휴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잠비아 정도로 소수에 그치는 수준이다. 몇 년 전 이웃 국가인 이탈리아도 3일 유급 생리휴가 법안이 상정되었으나 추진되지 못한 채 수포로 돌아간 바 있다. 이번 스페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안에 포함된 생리휴가제는 그 내용과 정부의 시도 자체만으로도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법으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하원과 상원을 통과해야 한다. 본 법안은 의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야 하며, 보통 수개월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안에 이번 법안이 제정될 확률은 다소 희박하다. 그러나 우선 생리휴가를 법제화하고자 한 스페인 정부의 노력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발전했으며, 만약 의회를 통과하여 법으로 제정될 경우 스페인은 유럽에서 생리휴가제를 도입하는 첫 국가로 기록될 전망이다.

• 참고문헌 •

- Bloomberg(2022.5.17.). "Plan to Grant Paid Leave for Period Pain Stirs Tensions in Spain",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2-05-17/plan-to-grant-paid-leave-for-period-pain-stirs-tensions-in-spain#xj4y7vzkg> (접속일: 2022.6.22.).
- Catalan News(2022.5.17.). "Spain approves menstrual leave and abortion for over 16s without parental consent bill", <https://www.catalannews.com/highlights/item/spain-approves-menstrual-leave-and-abortion-for-over-16s-without-parental-consent-bill-2> (접속일: 2022.6.22.).
- DW(2022.5.17.). "Spain: Cabinet approves menstrual leave bill", <https://www.dw.com/en/spain-cabinet-approves-menstrual-leave-bill/a-61830181> (접속일: 2022.6.22.).
- Euronews(2022.5.17.). "Spain approves plans to become the first European country to introduce paid 'menstrual leave'", <https://www.euronews.com/next/2022/05/17/spain-set-to-become-the-first-european-country-to-introduce-a-3-day-menstrual-leave-for-work> (접속일: 2022.6.22.).

덴마크, 개정된 육아휴직 관련 법 8월 발효⁸⁾

- 2022년 3월 초, 덴마크 의회는 기존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일부를 개정하는 법안을 가결하였다. 개정된 법은 오는 8월부터 적용되는데, 본격적인 새 개정법 발효를

7) 평등·반(反)성범죄부(Secretariat of State for Equality and against Gender Violence)는 평등부(Ministry of Equality) 산하 부서이다.

8) 객서희, 에라스무스 로테르담 대학(Erasmus University Rotterdam) 국제사회과학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al Studies) 객원연구원

앞두고 개정된 내용 일부를 개괄하고자 한다. 우선 이제까지 시행된 제도 내용을 살펴보면, 덴마크 여성은 출산 전 4주, 출산 후 14주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배우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2주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부모 각 32주(추가연장 14주 가능)를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 간 서로 양도하여 사용할 수 있었다.

- 이번에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여성은 출산 전 4주, 출산 후 2주 휴가, 육아휴직 22주가 주어진다. 배우자는 출산 후 2주간 배우자 출산휴가, 그리고 바로 이어서 육아휴직 22주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오는 8월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에서 주목할 점은 육아휴직 기간 사용에 있어 유연성과 강제성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주어진 육아휴직 22주 중 9주는 부모 각자에게 지정된 휴가로 양도할 수 없고, 나머지 13주는 부모 양측이 상대방에게 재량껏 양도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양도 가능한 13주 중 5주는 자녀가 9세가 될 때까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다.
- 기존 제도와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비교하면, 배우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은 2주(배우자 출산휴가)에서 11주(배우자 출산휴가 2주+양도 불가능한 육아휴직 기간 9주)로 대폭 확대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곧 새로 시행되는 제도는 일명 ‘24/24 모델’로 불리기도 하는데, 부모 양측 동등하게 산후 휴가/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합산하여 각 24주의 유급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재정비했기 때문이다.
- 또한, 덴마크 육아휴직 제도에서는 휴직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육아휴직 수당 총 수령액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부모가 시간제로 근로시간을 줄여 근무하면서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할 수 있다. 덴마크에서는 출산 관련 휴가를 크게 두 측면으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첫째는 휴가를 내고 근무하지 않을 권리(the right to absence), 둘째는 출산 후 모성 또는 부성수당을 수령할 권리(the right to receive benefits)다. 따라서 휴가를 사용하는 권리와는 별도로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수당 수령 여부, 금액을 책정 및 지급한다. 출산 전후 휴가를 취할 권리는 「모성보호법」(Maternity Act)에 의해 근로여부에 상관없이 보장받는다.
-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수당 급여의 경우, 출산휴가 및 수당 자격에 관한 법(Consolidation Act on Entitlement to Leave and Benefits in the Event of Childbirth)에 따라 개인의 근로 유무 여부, 계약 유형, 단체협약, 근로시간 등에 따라 급여자격과 수령액이 결정된다. 해당 정책은 덴마크 연금지급청(Udbetaling Danmark)에서 담당하고 있다. 최고 상한액은 2022년 주 37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책정할 때 세전 주당 4,465크로네(한화 약 80만 원)이다.
- 이번 개정된 법은 유럽연합(EU)에서 오는 8월 2일부터 회원국들이 반영해야 하는 새로운 지침(directive)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추진되었다. 해당 지침(Directive 2019/1158)에서는 남녀동등한 자녀 돌봄 분담, 태어난 자녀와의 적절한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 남성은 최소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본 지침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소한 국가별로 정해져 있는 병가 급여에 준하는 수당을 받는 유급휴가여야 한다고도 명시하고 있다.
- 더 코펜하겐 포스트(The Copenhagen Post)의 보도에 따르면, 마티아스 테스파예

(Mattias Tesfaye) 당시 평등부 장관 대리(Acting Minister for Employment and Gender Equality)는 본 개정법이 의회를 통과한 이후 “정부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더 많은 남성들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개별 부모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도 확보하길 바란다”라고 언급했다(2021).

- 이번 개정법은 덴마크 고용주 연맹(Confederation of Danish Employers, DA)과 노동조합연맹(Danish Trade Union Confederation, FH)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결과물이기도 하다. 더 코펜하겐 포스트에 따르면 노동조합연맹 부대표 마이브리트 베를라우(Majbrit Berlau)는 “이 논의는 서로 싸워야 하는 주제가 아니다. 아버지가 된 남성 근로자가 자녀를 위해 시간을 할애하는 권리의 문제다. 그리고 부모가 육아휴직 부담을 서로 나누어 짊어져야 여성 근로자들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의회에 개정안이 상정된 당시, 여러 정당이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일부 정당은 부 또는 모 당사자만 사용할 수 있는 지정된 휴직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반면 다른 정당들은 가족이나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지 지정된 휴가 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취하기도 했다.
- 덴마크 통계청(Statistics Denmark) 자료를 살펴보면, 자녀 출산 전 및 출산 후 첫 12개월 이내 여성이 휴가를 사용한 일수는 평균 280일, 남성은 35일에 불과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의 평균 휴가 사용 일수는 꾸준히 280~282일 수준을 유지했고, 남성의 평균 육아휴직 사용 일수는 29.7일에서 35일로 조금씩 증가했다. 최근 몇 년간 증가 추세를 보인 점은 고무적이나, 덴마크 정부 측에서는 남녀동등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제도적 정비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으로 오는 8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출산 및 육아휴직 관련 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만하다.

• 참고문헌 •

- EUR-Lex(2022). “Directive (EU) 2019/115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une 2019 on work-life balance for parents and carers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2010/18/EU”,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uriserv:OJ.L_.2019.188.01.0079.01.ENG (접속일: 2022.7.22).
- Horten(2022.3.3.). “Bill on ear - marked mater - nity leave has been adopted”, <https://en.horten.dk/news/2022/march/bill-on-earmarked-maternity-leave-has-been-adoptede/> (접속일: 2022.7.22).
- Life in Denmark(덴마크정부 행정정보 통합제공 사이트)(2022). “Maternity/paternity benefits”, <https://lifeindenmark.borger.dk/family-and-children/> (접속일: 2022.7.22.).
- Statistics Denmark(스웨덴 통계청)(2022). “Parental leave benefits”, <https://www.dst.dk/en/Statistik/emner/sociale-forhold/offentligt-forsoergede/barselsdagpenge> (접속일: 2022.7.22).
- The Copenhagen Post(2021.10.27.). “Government delivers new parental leave law”, <https://cphpost.dk/?p=128932> (접속일: 2022.7.22).
- The Copenhagen Post(2021.9.14.). “Denmark close to gender balance for parental leave”, <https://cphpost.dk/?p=127901> (접속일: 2022.7.22).
- The Local(2022.3.3.). “Danish parliament passes new law for ‘earmarked’ parental leave”, <https://www.thelocal.dk/20220303/danish-parliament-passes-new-law-for-earmarked-parental-leave/> (접속일: 2022.7.22).

일본, 정치 분야에서의 남녀 공동 참가의 추진에 관한 법률(개정)의 운용⁹⁾

- 최근 한국에서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렸다. 이번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후보 55명 중 10명(18.2%)가 여성이었으나, 모두 낙선하였다. 단위를 조금 더 내려도, 여성 기초단체장은 전체 226개 기초 단체장 중 7명(3.1%)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광역의원(14.8%)과 기초의원(25%)에서 여성은 조금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의 경우는 어떨까. 한국 국회의원 중 여성의원의 비율은 2019년 17%, 2020년 17.3%, 2021년 19%를 기록하고 있다.
- 이러한 한국의 상황은 이웃나라 일본의 상황을 궁금하게 한다. 2022년 7월 일본에서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에 해당하는 참의원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일본은 국회가 참의원(상원)과 중의원(하원)으로 나누어져 있는 양원제 국가로 의원수는 중의원 465명, 참의원 24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7월에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는 정권의 중간평가와 같은 성격을 지니며 보수야당을 합쳐 개헌선(2/3)을 확보할 수 있는나에 따라, 일본의 향후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선거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일본 내에서의 여성의 정치참여 상황과 이를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 및 법률의 운용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 우선, 지방의회부터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지방의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도도부현(都道府県: 일본의 광역자치단체)의회에서는 11.5%, 시의회에서는 16.2%, 정촌(町村: 일본의 행정구역의 소단위로 우리나라의 읍면과 비슷함)의회에서는 11.3%으로, 지방의회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은 우리나라보다도 적었다.
- 한편, 국회의원의 경우, 1996년에 일본에서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가 도입된 후, 중의원 의원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은 상승추세에 있으나, 2017년 10월 중의원 총선거 이후 2021년 4월 기준으로 여성의원의 비율은 9.9%(46명)를 기록하고 있다. 참의원에서도 여성의원의 비율은 상승추세이며, 2019년, 「정치 분야의 남녀공동참여 추진에 관한 법률」(2018년 법률 제28호)의 시행 후의 첫 참의원 통상선거 결과 참의원에서의 여성 비율은 2% 증가하여 2021년 5월 기준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최근의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의 비율은 중의원에서 17.8%(2017년), 참의원에서 28.1%(2019년)로 나타났으며, 여성 당선자의 비율은 중의원에서 10.1%(2017년), 참의원에서 22.6%(2019년)를 기록했다.
- 국회에서 여성의원 수가 적은 경우, 정책에 있어서 여성의 목소리가 제대로 대표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동경대 마에다 켄타로우 교수의 연구(2019)에 의하면, 2014년 총선거에서의 일본의 유권자와 당선자 집단에서 성별에 따른 주요정책에 대한 관심의 차이가 명확히 관찰되었다. 예를 들어 부부별성의 문제(결혼 후에 부부가 결혼 전의 각자의 성씨를 칭하는 것을 법률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성 유권자와 당선자는 남성 유권자와 당선자에 비해 더욱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 대해서는 이와

9) 전여주 동경대학교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박사과정

반대의 경향성(여성 유권자와 당선자가 더욱 반대)이 관찰되었다(前田健太郎, 2019: 159-163). 이렇듯 성별에 따른 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를 고려한다면, 여성의원원의 수가 적은 경우 여성의 관심은 실제 정책에 반영되기 어려워지므로,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서 국회 내에서의 여성의원 숫자 확보는 중요하다.

- 이와 함께 마에다 겐타로우 교수는 일본에서의 여성의 정치 참가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로 여성이 정치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규범을 지적하였다. 해당 규범으로 인해 일본에서는 유권자의 성별과 관련 없이 남성 후보자에 우선적으로 투표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실제로 여성 후보자가 여성스러운 모습을 보일 경우 정치 능력이 없다고 비판하고, 반대로 정치가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면 여성스러움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는 이중의 어려움을 가진다(前田健太郎, 2019: 171). 그러나 여성 정치인이 적은 결정적인 이유로는 여성 후보자가 남성 후보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문제가 지적되었다(前田健太郎, 2019: 174). 여성 후보자가 남성 후보자와 같은 비율로 당선되더라도, 여성 후보자가 남성 후보자에 비해 현저히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성 당선자의 수가 적어지게 된다.
-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2018년 5월 23일에 「정치 분야에서의 남녀 공동 참가의 추진에 관한 법률(政治分野における男女共同参画の推進に関する法律)」이 공포·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정치 분야에서의 남녀 공동 참여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남녀가 공동 참여하는 민주 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법률은 중의원, 참의원 및 지방의회의 선거에서 남녀 후보자의 수가 가능한 한 균등해지도록 하는 목표를 기본 원칙으로 하여, 국가·지방공공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책정 및 실시하도록 하고, 정당이 남녀 공직 후보자의 수에 대한 목표를 정하여 그러한 방침에 있어서 자주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또한, 2021년 6월, 「정치분야에서의 남녀 공동참가의 추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政治分野における男女共同参画の推進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이 공포 및 시행되면서 해당 법의 일부가 개정되었다. 당시의 개정안에는 정당에게 1) 후보자 선정 방법 개선, 2) 후보자가 될 만한 인재 육성, 3) 성희롱, 임신·육아로 인한 눈치를 주거나 불편한 분위기 조성하는 하라스먼트(harassment, ハラスメント)¹⁰⁾ 등에 대한 대책에도 자주적으로 임하도록 하는 노력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도 성희롱과 임신 육아로 인한 하라스먼트에의 대응을 비롯한 환경 정비 등의 시책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되었다. 또한 개정법에 따라 내각부 남녀공동참여국에서는 하라스먼트의 방지를 위한 의회 연수 교재를 작성하고, 지방의회에서의 1) 연수 실시 상황, 2) 규정 정비 상황, 3) 상담창구 설치 상황의 조사 및 공표를 통하여 의회의 대응을 촉진해갈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 해당 내용은 2020년 12월 25일에 결정된 남녀공동참여기본계획에 반영되었다. 이에

10) 영어 단어 harassment에서 따온 용어로 일본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임. 주로 합성어로서 끝에 '하라'를 붙어서 쓰임. 예를 들어 성희롱을 뜻하는 세쿠하라(セクハラ: sexual harassment), 임신 육아로 인한 하라스먼트는 마타하라(マタハラ: maternity harassment)로 표현함. 최근 '표하라'(표(票)+하라)와 같은 신조어가 생겨나며 갑질·괴롭힘을 뜻하는 말로 일본에서 여성이나 신진 의원 같은 '정치 약자'들을 괴롭히는 상황을 표현할 때 쓰기도 함(동아일보, 2022).

따라 마루카와 타마요(丸川珠代) 여성활약담당대신은 정당에 대하여 후보자 중 여성의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수치 목표의 설정이나 적극적 개선 조치 도입 등의 자주적인 대응을 요청하였다. 당시 대신은 자유민주당, 입헌민주당, 공명당, 일본유신당, 일본공산당 등의 9개 정당에 대하여 이러한 요청을 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서 정당들의 노력이 2022년 5월에 정부 자료를 통해서 공개되었다.

-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는 정당 내 여성 비율과 관련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시점에서의 후보예정자의 수를 살펴보면, 선거구와 비례대표를 합친 후보예정자의 숫자는 6월 15일 기준으로 527명이며, 이 중 여성후보예정자는 175명으로 전체 후보예정자의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직전의 선거(2019년)의 경우, 여성의 후보자의 비율이 28%(104명)였던 것과 비교하면, 과거에 비하여 여성의 후보자의 비율 및 숫자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부분에서 개선되고 있음을 보면 점차 여성 의원의 당선자 수 및 의회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그러나, 정당별 여성 후보자의 비율을 참고해보면 공명당(21%)과 자민당(23%)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고, 공산당(55%), 입헌민주당(49%), 사회당(42%)이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즉, 높은 의석 수를 지닌 정당들에서 여성 후보자의 비율은 여전히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정당의 의석수의 분포를 고려한다면 실제로 선거 후 결과는 위의 전망과 달라질 수도 있다.
- 요컨대, 일본에서의 여성의 낮은 정치 참가율이 여성의 과소대표 현상을 야기한다는 현실 인식으로부터, 여성의 정치 참가를 촉진시키기 위한 법의 제정 및 개정, 또한 구체적인 시책 마련이 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비록 우리나라의 여성의원 할당제와는 다르게 일본의 경우는 ‘노력 의무’에 그쳐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는 있으나, 해당 법률의 목표는 남녀 후보를 균등하게 하는 것으로 할당제에 비해서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해당 법률에 따른 정부의 요청을 받아 정당 내에서도 여성의 정치 참가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 결론적으로 해당 법률안은 일본에서의 여성의 정치참가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노력을 촉구하는 데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시점에서는 참의원 선거에서의 여성 후보 증가라는 측면에서 개선이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집권 연립정당들에서 여성 후보 증가가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결과적으로 7월의 참의원 선거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주목해서 지켜보아야 하겠다.

• 참고문헌 •

- 동아일보(2022.6.17.). “日 참의원 선거 레이스 시작… 자민당 ‘과반 목표’”,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616/113971040/1> (접속일: 2022.6.22.)
- 동아일보(2022.6.22.). “日, ‘정치 약자’ 향한 성희롱 막는 ‘갑질 방지 조례안’ 가결”,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20622/114061414/1> (접속일: 2022.6.23.)
- 여성가족부(2021.3.4.). “IPU 여성 국회의원 비율 및 각국의 순위”,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88 (접속일: 2022.6.22.)
- 연합뉴스(2022.6.2.). “[6·1 지방선거] 김은혜 0.15%p차 역전패…‘첫 여성 광역단체장’ 불발(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20602086251001> (접속일: 2022.6.22.)
- 衆議院(2022). “国会の構成”, https://www.shugiin.go.jp/internet/itdb_annai.nsf/html/statics/kokkai/kokkai_kousei.htm (접속일: 2022.6.22.)
- 内閣府男女共同参画局(2022). “地方議会における女性議員の割合の推移”, https://www.gender.go.jp/about_danjo/whitepaper/r03/zentai/html/zuhyo/zuhyo01-01-06.html (접속일: 2022.6.22.)
- 内閣府男女共同参画局(2022). “国の政策・方針決定過程への女性の参画”, https://www.gender.go.jp/about_danjo/whitepaper/r03/zentai/html/honpen/b1_s01_01.html (접속일: 2022.6.22.)
- 内閣府男女共同参画局(2022). “衆議院議員総選挙における候補者, 当選者に占める女性の割合の推移”, https://www.gender.go.jp/about_danjo/whitepaper/r03/zentai/html/zuhyo/zuhyo01-01-01.html (접속일: 2022.6.22.)
- 内閣府男女共同参画局(2022). “参議院議員通常選挙における候補者, 当選者に占める女性の割合の推移”, https://www.gender.go.jp/about_danjo/whitepaper/r03/zentai/html/zuhyo/zuhyo01-01-02.html (접속일: 2022.6.22.)
- 内閣府男女共同参画局(2021.9). “「共同参画」2021年9月号”, https://www.gender.go.jp/public/kyodosankaku/2021/202109/202109_04.html (접속일: 2022.6.22.)
- 前田健太郎(2019). 『女性のいない民主主義』 岩波新書.
- 内閣府男女共同参画局(2022). “政治分野における男女共同参画”, <https://www.gender.go.jp/policy/seijibunya/index.html> (접속일: 2022.6.22.)
- e-GOV 法令検索(2022). “政治分野における男女共同参画の推進に関する法律”,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430AC10000000028> (접속일: 2022.6.22.)
- 内閣府男女共同参画局(2022). “丸川大臣による各政党への要請 (令和3年7月~8月)”, https://www.gender.go.jp/policy/positive_act/yousei_03_07.html (접속일: 2022.6.22.)
- 内閣府男女共同参画局(2022.5.). “各政党における男女共同参画の取組状況と課題”, <https://www.gender.go.jp/policy/seijibunya/pdf/r03.pdf> (접속일: 2022.6.22.)
- NHK(2022.6.15.). “参院選 計527人が立候補予定 女性候補者が過去最多の見通し”, <https://www3.nhk.or.jp/news/html/20220615/k10013673061000.html> (접속일: 2022.6.22.)

제26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의 정당별 여성 정책 및 선거 결과 분석

- 2022년 7월 10일 일본에서는 참의원 선거가 열렸다.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회 내에서의 여성위원의 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취지하에 일본에서는 “정치 분야에서의 남녀 공동 참가의 추진에 관한 법률”을 마련했다. 또한 2020년 12월 일본 정부는 “제5차 남녀공동참획 기본계획”을 정부의 방침으로 결정하고, “2025년까지 국정 선거의 후보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35%”로 높이는 목표를 두었다. 이러한 법과 정부 방침의 취지에 따라 실제로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이 여성 후보자 수에 대한 수치 목표를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 주었다. 이에 본호에서는 일본의 참의원

선거에서 여성의 정치참가의 추진을 위하여 각 정당들이 보여 준 노력을 재검토하고, 그러한 노력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한다.

- 우선, 선거 전의 일본 정부 자료를 통하여 여성의 정치참가를 위한 각 정당의 노력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2022년 5월 공개된 내각부 남녀공동참획국의 자료에는 정치 분야에서의 남녀공동참획 추진을 위한 각 정당의 대처상황과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内閣府男女共同参画局, 2022). 해당 자료에서 여성의원예 대한 각 당의 목표 수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자유민주당(自由民主党)은 정치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여성의 저변을 넓히도록 인재 발굴과 육성을 추진하면서 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적극적으로 공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자유민주당은 간사장과 선거대책위원장명으로 국정뿐 아니라 지방의회에도 여성위원을 늘려 가도록 공시하고, 당의 여성국이 “국정 선거 및 지방선거에서의 여성후보자를 늘리는 등 여성의 정치 참획을 추진”하는 방침을 당의 지도부에 제시하는 등, 여성 후보자 배출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를 당 전체의 운영방침으로 마련해 두고 있다.
 - 입헌민주당(立憲民主党)은 의원 수의 남녀동수를 최종적인 목표로 하면서, 이번 선거에서는 여성후보자 비율을 50%에 가깝게 할 것과 모든 지역에서 적어도 한 명의 여성 의원이 배출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젠더평등과 관련한 개혁안(2021년 9월 16일)도 마련해 두고 있다.
 - 공명당(公明党)은 모든 분야의 인재를 배출하는 것을 고려하기 때문에 여성의원과 관련한 수치 목표는 두지 않고, 남녀를 불문하고 인물을 중심으로 후보자를 선정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지방의원 중 여성의원예 차지하는 비율은 30%를 넘고 있다(2021년 10월말 기준).
 - 일본유신회(日本維新の会)는 선거에서 후보자 공천이 인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성후보자의 비율에 관한 숫자 목표는 설정해두지 않았다고 한다.
 - 국민민주당(国民民主党)은 여성후보자의 비율을 35%로 하는 방침을 두고 있다.
 - 일본공산당(日本共産党)은, 자당이 지방의회 여성의원 비율이라는 측면에서 제1당이 되고 있는 점을 밝히며, 모든 선거에서 여성후보의 비율을 높이는 데 주력해 갈 방침과 함께 구체적인 수치 목표로 남녀후보자의 비율을 50%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 레이와신센구미(れいわ新選組)는 수치 목표를 두고 있지 않으나, 심사 등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면접을 하여 여성후보자의 선정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 사회민주당(社会民主党)은 국정 선거에서의 여성 후보자의 비율을 50%로 하는 것을 당의 활동 방침으로 하고, 당칙으로 여성할당제(쿼터제)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 NHK당은 여성 후보자의 공천과 관련하여 특별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 이상의 검토를 통해서 여성의 정치 참가를 위한 각 정당의 노력을 확인하였다. 다수의 정당들이 여성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배출하는 목표 및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수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정당과 그렇지 않은 정당 사이의 차이가 관찰되었

다. 그중 수치 목표를 특정하지 않는 정당들에서는 인물 중심의 후보자 공천이 우선적인 방침으로 강조되고 있었다.

- 한편으로 이번 참의원 선거를 즈음하여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에서 국회 의원 여성할당제(쿼터제)에 대한 각 정당의 의식조사를 진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여성의원 할당제와는 달리 일본에서 현재 시행되는 정치 분야에서의 남녀공동참가의 추진에 관한 법률은 여성 후보자의 목표 비율을 할당제보다 높게 설정할 수 있으나, 이는 노력 의무에 그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일본에서도 여성의원 할당제 등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각 정당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우선, 자유민주당(自由民主党), 일본유신회(日本維新の会), NHK당은 여성할당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으로,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이들의 여성후보자 비율은 일본 정부가 제시한 여성후보자의 목표치(35%)를 미달하고 있었다. 이들이 여성할당제에 반대하는 논리는 다음과 같았다. 자유민주당은 “남성의원이 남성을 대표하고 여성의원이 여성을 대표한다”라는 생각을 취하지 않으며, “성별이 다른 모든 자질에 우선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일본유신회는 단순한 수치 목표의 설정에 대해서는 신중하며, 그 보다는 여성 후보자와 의원이 활동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NHK당은 여성할당제는 본질적인 과제 해결이 아니며 무리한 여성 후보자의 공천으로 인해 여성이 원치 않는 환경에서 정치에 참가하는 등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남성의 정치 참여를 막을 수도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 다음으로, 여성할당제에 찬성한다고 밝힌 정당은 입헌민주당(立憲民主党), 공명당(公明党), 국민민주당(国民民主党), 일본공산당(日本共産党), 레이와신센구미(れいわ新選組), 사회민주당(社会民主党)으로, 이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았다. 입헌민주당은 정치 분야에서의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국정 선거에서의 여성할당제를 도입하여 남녀 반반의 균형을 이룰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또한, 공명당은 정치에 다양한 민의를 반영한다는 관점에서 정치 분야에서의 성별 차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민주당은 남녀 후보자 수를 최대한 균등하게 한다는 목표를 내걸어 여성 후보자의 비율을 35%까지 실현하겠다고 하며 찬성의 의사를 밝혔다. 일본공산당은 일본의 여성국회원의 비율이 세계 수준에 뒤처진다고 지적하며 여성할당제를 포함하여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하는 선거제도의 개혁을 주장했다. 한편, 레이와신센구미는 선거에서의 후보자 이외에도 공공기관의 의회나 대기업의 관리직 등에서 여성할당제를 통해 인원의 50%를 여성으로 할당할 것을 주장하였다. 사민당은 현재의 경직화되어 있는 정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성의원의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코로나 팬데믹의 대응에 있어서도 여성 정치인들이 많은 국가들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여 효과를 거두었다고 하며, 남녀평등 순위에 있어 뒤져있는 일본에서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당에게 여성후보자의 비율을 의무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러한 당들의 입장은 참의원 선거에서의 여성후보자와 관련한 목표로 나타났다. 입헌민주당과 공산당은 “여성 후보자 5할”이라는 목표와 함께 결과적으로 51.0%, 55.2%의 비율을 달성하였고, “35%”를 목표로 한 국민민주당은 40.9%의 비율을 달성하였다. 비

례대표제에 한정하여 “3할”의 목표를 내건 자유민주당은 이를 달성하였으나, 선거구를 합친 경우에는 여성 후보자의 비율이 23.2%에 그쳤다.

- 또한, 선거 공약에서 정치 분야에서의 여성의 참여를 언급한 정당들도 눈에 띈다. 각 당의 목표를 정리해 보면, 입헌민주당과 공산당은 “남녀동수”, 국민민주당은 “여성 후보자 비율 35%”의 실현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공명당과 사민당은 “여성할당제”를 언급하였고, 그중에서도 사민당은 “할당제 도입을 추진하여 모든 의사 결정 기관에서 여성의 비율을 50%를 목표로 향상”시켜나갈 방침을 제시했다(朝日新聞, 2022).
- 선거 결과를 정리해보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 수는 181명으로 전체 후보자 중 33.2%를 차지하였으며, 당선자 중 여성의원원의 숫자는 35명으로 전체 당선자 125명 중에서 28%를 차지하였다. 당별로 비교해 보면, 여성 당선자의 수는 자유민주당 의원이 13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자유민주당 당선의원 중 여성의 비율은 20.6%로 높지 않게 나타났다. 한편, 입헌민주당과 공산당의 경우 당선의원 중 여성의원원의 비율이 각각 52.9%와 50.0%를 기록하였다.
- 이러한 선거 결과로 인해 참의원 전체에서 여성의원원은 25.8%(64명)가 되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제5차 남녀공동참획 기본계획에서 이야기한 목표에는 미달하는 결과로, 그 이유는 여성후보자의 비율이 가장 낮았던 자유민주당(23.2%)과 공명당(20.8%)이 개선 의석의 60% 이상을 획득하여 야당의 여성후보의 당선을 압박하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 이상으로 일본에서의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법률과 정부 방침에 따른 정당들의 노력과 참의원 선거의 결과를 살펴보았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도 여성의원원의 수는 해당 법률과 정부 방침에서 정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해당 정책들의 영향으로 다수의 정당이 후보자 선정과 환경 마련 등의 노력을 한 결과 참의원 선거에서 여성의원원의 비율이 상당히 개선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선거에서의 역대 최대 여성의원 배출은 일본 내부에서 여성 정치인의 필요성의 인식과 이에 따른 법제 및 정책 마련이 효과를 발휘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즉, 일본 사회 내의 여성 정치인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관련 정책으로 정치 분야에서의 여성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의 여성의 정치 참가를 전망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관련한 법제와 정책의 향방을 지속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 BUSINESS INSIDER(2022.6.30.). “女性候補者比率が過去最高、でも実態は？クォータ制への賛否を主要9政党に聞いてみた【#参院選2022】”, <https://www.businessinsider.jp/post-255916> (접속일: 2022.7.20.)
- 毎日新聞(2022.7.11.). “女性当選者、過去最多の35人 女性比率過去最高も与党は低迷”, <https://mainichi.jp/articles/20220711/k00/00m/010/273000c> (접속일: 2022.7.20.)
- 内閣府男女共同参画局(2022.4.30.). “第5次男女共同参画基本計画における成果目標の動向”, https://www.gender.go.jp/about_danjo/seika_shihyo/pdf/numerical_targets_r040614.pdf (접속일: 2022.7.20.)
- 内閣府男女共同参画局(2022.5.). “各政党における男女共同参画の取組状況と課題”, <https://www.gender.go.jp/policy/seijibunya/pdf/r03.pdf> (접속일: 2022.7.20.)
- 朝日新聞(2022.6.23.). “女性候補、やっと3割 過去最高33.2% 「均等」 遠く参院選”,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5332406.html> (접속일: 2022.7.20.)
- nippon.com(2022.7.13.). “参院選の女性当選者、過去最多35人: 立憲, 共産は半数が女性”, <https://www.nippon.com/ja/japan-data/h01384/> (접속일: 2022.7.20.)
- 毎日新聞(2022.7.12.). “参院選2022: 女性当選, 最多35人 政府目標「30%」には届かず”, 東京朝刊 5頁 内政面.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국내*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49인 제재조치 결정

- 여성가족부는 제2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인의 명단을 여성가족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법무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출국금지(17인) 및 운전면허 정지처분(30인) 요청
 - 제재조치 시행 이래 처음으로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철회한 경우와 양육비 채무액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이후 정기적 지급의사를 밝혀 출국금지 요청 취하
 -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5천만 원→3천만 원, 시행령 개정중) 완화 등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한 제도 강화를 통해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높일 계획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06.17]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610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실시

- 여성가족부는 2022년 7월부터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251만 6천 원)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하는 시범사업 실시
 - 청소년부모 가구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근거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뜻하며 시범사업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부모의 신청을 받아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실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06.21]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612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국내동향」 중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의 주요 보도자료를 정리한 것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 실시

- 여성가족부는 중위소득 72% 이하(2인 가구, 234만 7천 원)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각종 복지 정보를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연계하는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 실시
 - ‘자립지원패키지’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수행기관이 상담 등 정서지원과 자녀 양육, 취업 등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패키지로 연계해주는 사례관리로,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전국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에서 청소년 한부모의 신청을 받아 12월까지 실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06.28]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jsessionid=AeenlOWy5-BWtHp+yUh48Ti6.mogef10?mid=news405&bbtSn=708628

수사기관 64개소, 여성폭력 2차 피해방지 시범교육 실시

- 여성가족부는 2022년 7개 부처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여성폭력 2차 피해방지」 전문강사 파견 시범교육 실시
 - 이번 교육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으로 수사기관의 「2차 피해 방지교육」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검찰, 경찰, 근로감독관 등 일선 현장에서 2차 피해 방지교육이 조기에 안착되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
 - 여성가족부는 7개 부처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2년 7월부터 전체 647개 수사기관 중 참여를 신청한 64개소(2,812명)에 전문강사를 파견해 「2차 피해 방지교육」 실시 계획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06.29]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jsessionid=AeenlOWy5-BWtHp+yUh48Ti6.mogef10?mid=news405&bbtSn=708620

해바라기센터 연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국 확대

- 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추진해 온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현재 8개(7개 시·도) 해바라기센터에서 34개(16개 시·도) 센터로 전국 확대 시행
 - 법원이 아닌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해바라기 센터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에 참여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아동·청소년 피해자와 친숙한 상담원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여 공판 과정을 지원받았으며 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는 영상증인신문 전국 확대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영상증인신문 운영 안내서’를 전국 법원(67개)과 해바라기센터(34개)에 배포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07.20]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jsessionid=9b6lDicplT9B1fjviMY9XVfY.mogef11?mid=news405&bbtSn=708668

위기·저소득 청소년 생활 지원금 확대

- 여성가족부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생활지원금 상한을 월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여성청소년(만 9~24세) 생리용품 지원금액은 2022년 8월부터 월 1만 2천 원에서 1만 3천 원으로 인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 9세에서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2022년 8월부터 생활지원금 상한액을 월 65만원으로 인상하여 취약계층 위기청소년 생활 지원 강화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편리한 곳에서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구매권을 지원하는 데 있어 2022년 지원대상 연령을 종전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했으며 지원금액은 월 13,000원(연 최대 150,000원)으로 2022년 상반기보다 약 8.3% 인상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07.21]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jsessionid=9b6IDicplT9B1fjviMY9XVfy.mogef11?mid=news405&bbtSn=708673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 여성가족부는 2022년 8월부터 생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한부모가구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동양육비 지원
 - 정부는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방안」 후속조치로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구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 2022년부터 한부모가족에 대한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를 신규 적용하는 등 한부모가 안정적 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07.26]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jsessionid=xWCGEwCw1GvQMMys1qsmM59z.mogef11?mid=news405&bbtSn=708679

대학 대상 폭력예방교육 실시

- 여성가족부는 대학 내 성폭력 사건 발생을 계기로 2022년 9월부터 대학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
 - 디지털 성범죄 등 성폭력 예방과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총 100회 이상 교육 예정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08.03]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jsessionid=xWCGEwCw1GvQMMys1qsmM59z.mogef11?mid=news405&bbtSn=708690

양육비채무액 3천만원 이상, 양육비 3회 미납 시 출국금지 가능

- 정부는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 2022년 8월 16일부터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아지고, 양육비 채무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해지는 한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을 현행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서 100분의 75 이하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08.09]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sessionId=xWCGEwCw1GvQMMys1qsmM59z.mogef11?mid=news405&bbtSn=708695

여성가족부, 202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보고

-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시도 교육청 포함)에서 추진한 '202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국무회의에 보고
 - 2021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은 법령과 사업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 개선계획 8,716건을 수립하고, 4,566건(52.4%) 개선
 - 고용노동부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출산 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였고, 대전광역시 1인 가구 맞춤형 지원을 위해 1인 가구 생활실태조사를 토대로 성별 특성을 반영한 고용 및 생활상담(컨설팅), 안전확보 및 사례관리 방안 제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08.16]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sessionId=cuY1KvAfiuytEUuZnsMFUOOi.mogef21?mid=news405&bbtSn=708712

여성가족부, 스토킹 피해자 임시주거지원 시범사업 추진

-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스토킹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 논의
 -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특화서비스를 개발하고, 피해자가 현 거주지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긴급임시숙소와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지원 등 시범사업 추진 계획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08.25]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724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 시행

-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힘.
 -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북한 이탈주민 자녀인 영유아를 추가하여 북한 이탈주민

자녀가 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경우 지원 확대

- 기존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에 관한 조문을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정하고, 위탁의 주체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하여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바탕 마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06.22]

• 참고문헌 •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NT_SEQ=371863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발표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양한 매체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해요인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발표
 - 코로나19와 다양해진 매체환경으로 청소년이 미디어 노출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 사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청소년 유해환경 대응에 중점을 두고, 2021년 9월부터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전문가 및 현장 의견 수렴,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
 -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 지원을 요청한 10대 청소년과 사이버범죄로 검거된 10대 청소년도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 신속한 심의·차단을 추진하고, 경찰 위장 수사 등을 통해 청소년 대상 길들이기(그루밍) 등 온라인 성착취 엄중 단속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06.29]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jsessionid=AeenlOWy5-BWtHp+yUh48Ti6.mogef10?mid=news405&bbtSn=708631

지역사회 기반 치매돌봄서비스 고도화

- 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치매 환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강화하고 다양한 돌봄·의료서비스 추진
 - 치매안심통합시스템과 건강검진(인지기능장애검사)과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하고 치매 관련 정보 및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며 치매안심센터는 다양한 지역자원과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허브기관’으로 고도화 추진 계획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07.29]

• 참고문헌 •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3&CNT_SEQ=372296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비율 지속 증가

-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공무원 현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 책자 발간
 - 2021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은 145,379명(48.1%)으로 2020년(136,071명, 46.6%) 대비 1.5%p 증가했으며 5급 이상 공무원 25,431명 중 여성은 6,171명(24.3%)으로 2020년 대비 3.5%p 증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2.06.30]

• 참고문헌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lId=92780

[중소벤처기업부]

제1회 여성기업 주간 개최

- 중소기업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기업법 개정으로 여성경제인의 날(7월 6일)을 포함한 7월 첫째 주를 여성기업주간으로 지정, 국민경제에 공헌한 여성기업인 포상 및 「제1회 여성기업 주간 개막행사」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2.07.05]

• 참고문헌 •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ldx=86&bcldx=1034678&parentSeq=1034678>

[법무부]

법무부, ‘스토킹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도입 추진

-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톱킹범죄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스톱킹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개정안 시행을 통해 전자장치 부착과 접근금지명령을 통한 다각적피해자 보호시스템의 구축으로 국민의 안전이 강화되고, 스톱킹범죄자의 재범의 효과적 예방 기대 [법무부 보도자료, 2022.08.17]

• 참고문헌 •

<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YyMTgy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l0M0QI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l2cmdzRW5kZGVtdHlIM0QIMjZpc1ZpZXdNaW5lJTNEZmFsc2UiMjZwYWdlJTNEMiUyNmJic09wZW5kcmRTZXEIM0QIMjZzcmNoQ29sdW1uJTNEJTl2c3JjaFdYZCUzRCUyNg%3D%3D>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중간 결과 발표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2년 3월부터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 집중단속 4개월 동안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총 801명 검거, 53명 구속하였으며, 전체 검거 사건(786건) 중 아동성착취물 범죄(294건, 37.4%)와 불법촬영물범죄(269건, 34.2%)가 가장 큰 비중(71.6%)을 차지하였고, 불법성영상물(24.5%), 허위영상물(3.8%) 순으로 검거
 - 10대 피해자는 아동성착취물 범죄와 허위영상물 범죄를 가장 많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10~20대 피해자는 아동성착취물 범죄에서, 30~40대 피해자는 불법촬영물·불법성영상물범죄에서 범행 비중이 높았음. [경찰청 보도자료, 2022.07.28]

• 참고문헌 •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2&q_bbscttSn=20220728070601372&q_tab=&q_searchKeyTy=&q_searchVal=&q_rowPerPage=10&q_currPage=1&q_sortName=&q_sortOrder=

